

참석하신 전문가들이 4차산업혁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준비해야 할 일도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4차산업혁명이 우리의 경제·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4차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는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Big-data의 열세입니다. AI와 Big-Data가 혁신의 핵심이 될 것이며 두가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므로 두 가지의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 측면에서 강대국에 비해 규모가 작아 매우 불리한 입장이며, 또한 북한과 대치한 안보상황에 따라 데이터의 전면적 개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주의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여 집단이기주의가 남아있는 것도 부정적 영향이 됩니다. 두번째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4차산업혁명에 적응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입니다. 협력과 창의성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문제를 맞추기 위한 주입식 교육을 혁파해야 하는데 당분간은 변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로봇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 사이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강대국과 약소국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그 많은 이슈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몇 가지에 집중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부 과학자는 지능로봇이 개발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데 그럼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인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과학자들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에는 지리적 국경과 시대적 경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맞지 않는 일자리는 아무리 붙들고 싶어도 결국 외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문명의 발전에 따라 필요가 없어지는 일자리는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서 외국으로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기업이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기업에 도와줄 수 있도록 루트를 만들어 주고, 은퇴 후에도 그런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